김관영 도지사, 전개공 사장 '임명 강행' … 도의회, '초강경' 대응

"개발공사 혁신 최적" vs "부적격"

〈김관영 도지사〉 〈도의회〉

김관영 도지사가 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제10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신임 서경석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에 대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같은 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문보고 마감일까지 송부되지 않아 절차 따라 임명
김 지사 "도의회 비공개 요구 아쉬워… 의회 소통에 협조"
도의회 "임명 강행 반대… 고발사안 되면 조치 취할 것"

김관영 도지사가 인사청문 파행 논란의 중심인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 중단과 함께 임명 반대를 요구한 전북도의회가 즉각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3일 오후 김 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서경석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은 청문보고서 마감일인 2일까지 송부되지 않아 김 지사가 절차에 따라 임명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나, 업무 능력 및 준비성 부족과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청문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수여식 직후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개발공사가 침체기를 넘어서서 역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 판단했다. 서 사장이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속기록도 봤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새기면서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해 김 지사는 "도의회의 비공개 자료 공개는 협약에 위배된다. 일부 청문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언론을 통해 표명한 것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다만 김 지사는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임명은 임명이지만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협조해야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즉각 반발함과 동시에 고발 조치 등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주영은 의장 등 도의회 의원들은 김 지사의 임명 직후 긴급회의를 거친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국주 의장 등은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들이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채택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강도 높게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였기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김관영 지사의 도정 철학이 벌써부터 공허한 수사로 퇴색한 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과 우려마저 든다"고 했다.

의원들은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돼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증여세 납부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함으로써 후보자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인사청문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의회 차원에서 고발 사안이 된다면 조치를 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도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조사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거부 등 도의회 차원의 총력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박정규 도의원, 전북 농촌형 주민자치회 구축활성화 포럼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행정자치위, 임실)은 3일 전북 농촌현실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구축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북도의회, 임실군의회, (사)지역농업연구원이 공동주최 했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와 활력 저하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전라북도 농촌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는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며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하 단장은 "정부 이슈가 지역소멸 인구감소에 맞춰져 있는만큼 지역소멸기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처럼 변하는 정부 환경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주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할 때 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 센터장은 충남형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제도화와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 등을 이끌어 내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후 이지선 남원시 농촌산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오광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김정흠 임실군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전문성 향상 위한 연찬회 열어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3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주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2022 전주시의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 앞서 전라북도청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시의원들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이진섭 강사의 '청렴 반부패를 실천하는 리더십' 강의로 오전을 보냈다.

오후에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박노수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전략과 자료요구기법 및 사례분석',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산 심의'를 연달아 들으며 바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찬회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루 3개 부문 6시간 강의라는 숨가쁜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김영태 기자

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보고할 것"

"尹정부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 국힘, 국조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여권에서 띄운 여야정 공동 협의체 구성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언론에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 여야가 모여 조속히 논의의 첫발을 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 단독으로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당연히 정의당과 얘기할 생각이 있다. 곧 수석 간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의 내용을 두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자료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기사를 보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가 나오지 않고 거짓말하는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행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국민들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의힘도 정쟁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자료를 내지 않고 숨기려 한다면 국회의원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에도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한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움직여야 한다"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를 두고는 "지금은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빠르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넘어서는 특검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가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정확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면 추후 요구서를 만들어 그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